

첨단·유턴기업, FTZ 입주 쉬워진다... 수출비중 30%로 완화

(자유무역지역)

산업부, 관련 개정령안 13일 시행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후속조치
민관 'FTZ투자유치 지원단' 꾸리

첨단·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현행 | |
|------|--------------------------------|
| 구분 | 입주자격 |
| 외투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
| 첨단기업 |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 유턴기업 | ·매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가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기준 수출은 3195배 성장했고, 외투는 464배, 고용은 24배 늘었다. 현재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1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34.7㎢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 규모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

라 정부는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총 1025개사로 이 가운데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개선(안) | |
|-------|-----------------------|
| 구분 | 입주자격 |
| 외투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
| 첨단기업 | ·수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 유턴기업 | ·매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 (수출비중) 大 50%, 중견 40%, 중소 30%

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 (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중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우측 두 번째)이 6일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부 대회의실에서 강성천 중소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올인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했다.

두 부처는 우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

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과 산단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데이터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기업,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하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해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다지기도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실적 '역대최고'

농식품부, 41.5억 달러 15% 증가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맞춤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 5400만달러다. 이는 6월 누계 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다. 수출 증가

율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7억2000만달러로 11.4%, 가공식품이 34억4000만달러로 16.2% 증가했으며, 시장별로는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유럽연합)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

신선 농산물 중에는 인삼류(1억2090만 달러, 25.2% ↑), 김치(86.8, 20.1%), 딸기(48.9, 24.9%), 유자차(25.2, 21.7%) 등이, 가공식품 중에선 면류(432.3, 9.5%), 과자류(282.5, 15.3%), 음료(255.2, 30.3%), 증가가 컸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 고용율 46.8%... 인천시 '일자리 대상'

바이오공정 인력센터설치 등 노력
인천시 포함 64개 지자체 수상

광역시 중 청년 고용률 1위를 달성한 인천시가 올해 일자리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인천시는 연간 2000여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6일 대전 호텔ICC에서 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인천시 포함 64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인천시는 산학연 협업체 등을 통해 유망산업인 바이오 등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운송업 등 피해 업종이 밀집해 있지만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청년 고용률(46.8%)을 기록했다.

부문별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강원도와 고양시에게 돌아갔다.

강원도는 민간과 협력해 도에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완성차기업과 부품업체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강원형 상생형 일자리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총 7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7개 기업이 참여해 5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양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연한 100억원의 일자리기금을 활용,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희망

알바 6000' 사업을 통해 6000여명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했고, 올해 21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상한 지자체에게 일자리 사업 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매년 일자리대상을 열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장은 공시제를 통해 임기 내 추진할 일자리 대책과 목표를 공고해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지역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인지 심사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시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국표원 '전기차 표준화 포럼' 발족

충전기·배터리 등 5개 분과 구성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했다. 전기차 통합 표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옐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대차, 르노삼성, 한국지엠과 차량부품업체, 충전기업체,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전기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충전기,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차량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차량, 충전 인프라, 전력망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복합시스템 차원의 표준화 논의에 나선다.

포럼은 우선 향후 본격 보급될 출력 400kW급 이상 초급속충전기가 기존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냉식 냉각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표준과 안전기준

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제정·보급하고, 표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장비 적기 구축 등에 나선다.

또 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해 온 충전기 통신규약을 표준화해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 충전기 통신규약이 표준화되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와 전력망 양방향으로 연결해 전기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저장시스템(ESS)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차세대 충전방식인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는 무선충전 핵심기술 3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했고 국내 전문가가 공동 대응을 통해 20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1학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승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D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특별승인제도 2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